

시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정서 유념할 3가지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前 대한지리학회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의 시장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이 뜨겁다. 예비경선으로 5인이 압축됐다. 이번 주엔 3개 권역 토론회가 열린다. 4월 3일부터 5일까지 본경선이 열린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결선투표를 한다. 아마도 결선투표까지 갈 듯싶다.

지난주 열린 TV 토론회는 아파트 반상회 수준이었다. 광주 기반 후보는 전남 사정을, 반대로 전남 기반 후보는 광주를 잘 몰랐다. 후보 간 정책을 둘러싼 토론회가 아니라 사랑방 좌담이었다. 정치적·정책적 내용이 쌓인 후보는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열릴 방송사 초청 토론회와 권역별 토론회도 대동소이할 것이 분명하다.

필자가 자주 듣는 질문이다. '교수님,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면 무엇이 좋습니까?' 광주시민은 물론이고, 전남에 사는 장삼이사도 궁금해 하는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후보들은 AI, 반도체, RE100 등을 들먹이고, 시민도 궁금증엔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용이 없다느니, 무능하다느니, 참신하지 않다느니 하는 비아냥이다. 후보들은 자신이 통합특별시를 천지개벽

시킬 적임자라 설파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다. 통합시장은 4년 동안 통합의 뒤흔다끼리만 하다 단임으로 끝날 것이다. 의회 의원수 조정, 주청사 위치, 전남권 국립대 병원 위치, 산하기관 통폐합 등 '디테일에 숨은 악마'가 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의 실수로 단임 열차 탑승은 필연이다.

통합특별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절대 아니다. 몸집이 약간 큰 늙은 거위일 뿐이다. 통합해 봐야 인구는 부산보다 적고, 인천보다 약간 많다. 1인당 GRDP(24년)은 경북과 경기보다 적다. 그런데 인구와 1인당 GRDP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 게다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의 남방 한계선(기흥, 화성)에서 가장 멀다. 전북 새만금보다 더 멀다. 20조원을 받아 구조적, 지리적 조건을 상쇄해 황금알은 아니지만 황동(黃銅)알을 낳는 거위로 키우려고 통합 속도전을 벌였다. 하지만 향후 항로는 불투명하다.

통합특별시장은 중요하다. 통합의 뒤흔다끼리를 하지만, 새로운 청사진을 설계하기 때문이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우리 동네의 정치적 풍토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백마 탄 초인'이 나타날 줄 알았다. 하지만 기적은 없었다. 예비경선 통과 5인 중에서 뽑아야 한다. 그렇다면 3가지 필요조건을 가진 후보를 찾아보자.

첫째, 정치력을 가져야 한다. 역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중 정치력을 가진 리더를 꼽으려면 단연 박광태 전 시장이다. 광주가 기독교를 양보해 나주 혁신도시를 만들었

다. 4만 신도시 탄생은 박광태 전 시장 작품이다. 행정적 판단이었으면 불가능했다. 향후 통합특별시엔 이런 의사결정 건수가 부지기수다. 광주권이 전남권에 양보하고,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서로 양보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행정력이 아닌 정치다.

둘째,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광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려고 통합특별시를 만들었다. 불완전한 진실이다. 통합시장 임면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좌지우지할 것이다. 천하의 강은태와 이용섭이 단임으로 끝난 이유다. 통합특별시 관련 디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광주 시민사회단체' 목소리를 다독일 리더십이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특별시는 산으로 갈 것이다.

셋째, 싱크탱크를 키울 마인드 소유자다. 후보들은 미래 먹거리를 들먹인다. 미래 먹거리를 기획하고 실행할 로드맵은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인내에서 나온다. 연구원을 통합해 국도연구원 수준으로 키워야 광주특별시장 미래가 담보된다. 5인 후보 중 누가 그런 사람인지 따져봐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통합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특별시는 '특별한 시'가 절대 아니다. 시민을 현혹하려고 '특별'을 넣은 정치적 수사다. 통합특별시 안착의 1차 관문은 시장을 잘 뽑는 일이다. 5인 중 '백마 탄 초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차선책을 찾아보자. 속도전을 치른 시민단체는 눈 씻고 찾아보면 보일 수 있다.

社說

시도민 삶 직결 복지·보건 통합체계 구축에 만전을

광주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2세대 공동체 돌봄, 3세대 의료 돌봄, 4세대 기본돌봄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달 말 전국대회를 통해 지자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장 실행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복지·보건정책 연계와 실질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첫 실무 협의를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선 통합돌봄 체계를 비롯해 공공공간의 네트워크 구축, 감염병 공동 대응, 취약계층 지원 연계 등 동반성장 효과를 낼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양 시도는 지역별로 상이한 수혜 기준과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통합돌봄과 공공의료의 중심으로 거주지에 상관없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완성할 계획이다.

행정 구역을 합치는 차원을 넘어선다. 특히 시도민 삶의 질과 밀접한 핵심 영역인 돌봄·의료 서비스를 직접 체감해야 초광역 메가시티 시대를 실감할 수 있다. 우려되는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320만명 누구나가 두텁게 누리는 대표 시책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의 가족 책임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을 국가가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병원 대신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혁신이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미래를 열어야 한다. 전국적 확장을 통해 '5극3특' 균형발전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 고품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공동체의 해체를 늦출 효과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도 통합 이후 돌봄체계 개편, 복지서비스 변화, 공공의료 강화 등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차이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어느 지역이든 절대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특별법 특례 조항에 따라 특별시·행·재정적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도록 제반 준비를 마쳐야 한다.

'신안철교 재가설' 광주역 폐쇄는 상습침수 대책 아냐

국가철도공단이 광주 복구의 건의로 서방천 수해 예방을 위한 신안철교 재가설을 검토하면서 공사 기간 광주역(광주역-광주송정역) 운행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임시철교를 만들어야 한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하겠다.

철도노조 조합지방본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도 이같은 사실을 반증한다. 실제로 응답자의 90.9%가 반대했으며, 이중 62.1%는 '전면 반대', 28.8%는 '임시 우회선로 설치 후 운행 지속'을 선택했다. 노조는 시민들의 의견이 확인됐다며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은 이를 반영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방천과 용봉천 일대의 침수 문제 해결 역시 시급하다. 광주시의 회가 지난해 9월 수해 직후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고준일 선임연구원은 "도심 침수는 예측할 수 없는 극한의 폭우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도시계

획 자체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천 복개와 좁은 단면, 분리된 하수 시스템, 신안철교 교각 구조 등이 물의 흐름을 막았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피해만 모두 7차례에 이른다. 특히 2020년과 2025년에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심각했다. 그렇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지는 못하는 노릇이다. 촘촘하게 박힌 철교의 교각 수를 줄임으로써 수위를 낮춰 원활하게 하는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 타당하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을 모은 뒤 기술·행정적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 대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광주역을 4년 이상 사실상 폐쇄하는 방식이다. 하루 1천명 정도가 오가고 있다. 일상을 멈춰 세우는 행위다. 이용 비중이 높은 거점인 만큼 대체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다.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이라면 곤란하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한다. 예산 논리보다 시민 편의가 우선이다.

현장칼럼



류혜정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 교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대문헌터스(이하 케데헌) OST 'Golden'이 저명한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 이어, 오스카 시상식에서 2관왕을 달성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케데헌 열풍과 최근 광화문에서 열린 BTS의 공연까지 근래 전 세계로 번져온 K-푸드, 뷰티 등 K-컬처의 저력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K라는 단어만 앞에 붙으면 한국 문화의 자긍심을 느끼는 요즘, 얼마나 어깨가 으쓱한 일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교통문화는 어떠한가. 문화는 콘텐츠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의 태도와 가치관까지 반영된다. 그렇기에 교통문화 또한 우리가 세

K-컬처를 넘어, K-교통문화로

계에 보여주는 또 하나의 'K-컬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자동차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안전속도 5030, 어린이보호구역 처벌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졌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2024년 2천5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3명(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보행 사망자는 감소세가 더디고, 그 중 고령 보행자가 약 67%를 차지한다는 점은 우리나라 도로의 민낯을 드러낸다. 제도는 발전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우리는 자랑할 만한 K-교통문화를 가졌는지 자문해 본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장면을 마주한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 이어지는 꼬리물기. 그 사이를 잠시 못하고 올려 퍼지

는 경적.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가 눈치를 보며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어린이 통학버스 앞에서 속도 줄이지 않은 차 스쳐 지나가는 차들...

이러한 모습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의 단면이다.

한국의 문화적인 매력이나 세계적으로 통하는 한류 현상이 무엇보다도 한국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화와 역사에 대해 호기심과 자긍심을 갖게 했다. 그러나 자긍심은 성찰 위에서 더욱 단단해진다. 눈부신 성과에 취해 부족한 부분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성장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교통안전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도로를 바꾸고 시설을 확충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다. 보행자를 배려하는 작은 습관, 잠시 멈추는 선택, 교통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모일 때 비로소 선진 교통문화는 완성된다. 이제는 K-컬처를 넘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K-교통문화'를 세계에 보여줄 때다.

독자투고

개학 시기, 청소년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개학 시즌, 왜 더욱 주의가 필요한가? 개학을 맞아 학교와 학원, 친구들과의 만남이 많아지는 시점이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이 외출할 기회가 많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외로움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이버도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SNS 단체방, 문자 메시지, 지인 추천을 통해 불법 스포츠도도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각 가정에서는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 습관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또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건수는 적정기인 신학기(3-4월)에는 타 월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조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결과,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2%), 집단따돌림(16.3%), 신체폭력(14.4%), 사이버폭력(7.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교에서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스마트폰·SNS 사용이 일상화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성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의 학교폭력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저연령화되고 있다.

이에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원이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자녀가 외출할 때에는 어디에 가는지, 누구와 있는지를 체크하고, 낯선 사람과의 접촉에 대한 경계심을 계속해 일깨워 줘야 한다.

또한, 자녀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안

전 대처법과 비상 연락처를 항상 공유해야 한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포경찰서(학교전담경찰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각 학교,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예방 캠페인과 안전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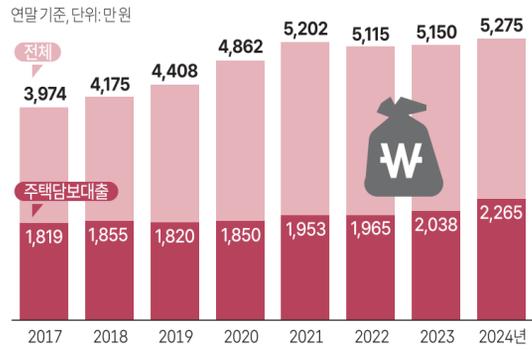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이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작은 주의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영재·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 추이



연말 기준, 단위: 만원

연말 기준, 단위: 만원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임금근로자의 개인 대출 잔액이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1% 넘게 증가하면서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평균 대출 잔액은 평균 5천275만원으로, 전년보다 2.4%(125만원) 늘었다. 2022년 이후 2년째 상승세로, 1년 전(0.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대출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2천265만원으로 11.1%(227만원) 늘었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이고 증가 폭도 가장 크다. 주택담보대출액은 2019년 이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9%로 전년(39.5%)보다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40대 평균 대출은 5.1% 늘어 8천18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2.5% 증가한 7천133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Phone Number, and other contact info. Includes Fax, Ad, and Subscription info.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